

일본 「원전 제로」 전략의 주요 쟁점

- 일본의 원전 제로 방침은 脫원전을 강조하면서도 핵연료 재처리는 계속한다 등 모순이 많아 내외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
- 향후 경제계 및 지자체와의 의견 대립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임

□ 원전 제로 방침의 모순

- 일본정부에서 발표한 “신에너지·환경전략”(’12.9.14)은 2030년대에 원전 제로를 목표로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
- 그러나 일본 민주당이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고려해 급조한 내용으로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
 - 선거를 의식해 脫원전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 정치주도형 의사 결정
 - 원전 제로를 강조하면서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확인을 받은 원전에 한해 “재가동” 허용 등, 원전 폐기와 유지의 양쪽 방향을 병기
 - * 다른 문제로서 △원전 제로의 실현 가능성이나 시기, △전력 시스템 개혁 문제, △ 省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실천 과정 등이 불투명

□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

- 방침에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취급에 대한 언급이 없어 원전을 건설 중인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

- 경제산업성은 이미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는 것으로, 2008년 5월부터 건설을 시작한 아오모리현 오오마 원전의 공사 진행을 용인
- * 2005년 12월부터 건설 중인 시마네현 원전 3호기도 완성 단계
- 그러나 2030년대에 원전이 제로가 되었을 때 핵연료 재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 없음

□ 경제계의 반대와 원전 기술 보전 문제

- 경단련과 일본상의 등은 노동자의 생활 보호를 이유로 일본 정부의 脫원전 방침에 반론
- 일본 기업들은 원전에 관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脫원전으로 기술 및 인재가 상실되는 것에 대해 우려
- 방침에 원전기술 수출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대해, 일본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일방적으로 수출하면 기술 보전이 어렵다고 지적
- 또한 일본의 입지경쟁력이 저하되어 해외로부터 투자가 감소한다는 점도 우려
- * 경제계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쟁점

쟁점 1 전기요금의 상승 : 전기요금 상승으로 제조업의 해외 이전 가속
쟁점 2 확대되는 공동화 : 공동화 가속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움
쟁점 3 해외에서 투자 감소 : 입지경쟁력이 떨어져 해외로부터 투자가 부진
쟁점 4 원자력 관련 기술 유출 : 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인재 육성과 확보에 차질

출처 : 일본경제신문에서 정리(2012.9.19.)

□ 국제적 신뢰성 및 국익에 대한 영향

-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를 영국이나 프랑스의 기업에 위탁하고 있지만, 일본 정부는 원전 제로 방침을 만들면서 각국의 관계자와 의사소통을 소홀히 해 의심을 받고 있음

- 프랑스는 일본의 脫원전에 의한 수익 감소를 염려
- 도쿄전력은 2012년 7월에 일본 금융기관들로부터 1조700억엔의 융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원전 제로가 실현되면 융자의 회수도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음
- 화력 발전은 연료 조달 비용 및 온난화 가스 배출이 문제가 되고,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과제

□ 시사점

- 일본 경제계는 원전 제로가 달성되면 원전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해 경제 성장 및 고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
- 특히, 원자력 의존도가 큰 한국과 원전 관련 산업 경쟁력에서 열세가 될 것을 우려
- 한국의 원전 설비 사용률은 90% 이상, 2011년의 총 발전량 기준 원자력 점유율은 31.1%로 일본보다 높음

* 자료: 한국원자력산업회의 “국내 원전 현황” <http://www.kaif.or.kr/pds/09.asp>

- 원전 제로 방침은 19일 각료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, 결정이 지연되어 일본의 省에너지 전략에 대한 방향은 불투명
- 일본 정부는 방침의 내용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하지만, 정책에 “원전 제로” 포함 여부는 언급 없음
- 우리도 향후 脫원전 등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본의 원전 제로 정책의 결정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

<참고자료>

일본경제신문(2012.9.15/19)